

■ 광주·전남 의원들 상임위 배분 어떻게

유선호 법사·이낙연 지식경제위원장 유력

지식경제 김재균·김영진, 재경 김효석·강운태·박주선

국토해양 주승용·이용섭, 문광위 조영택·서갑원 거론

청와대의 장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발발에 따라, 18대 국회의 최종적인 원 구성 합의가 도출되는 듯했지만 상임위 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간의 내부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중진의원들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유선호, 이낙연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유력하며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문광위, 농수산위 등 지역 현안사업 관련 상임위에 복수의 의원들이 포진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잠정합의한 상임위원장 의석은 총 18개로 한나라당이 12개, 민주당이 6개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는 ▲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부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보건복지가족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법사위 ▲지식경제위 ▲농림수산업 ▲교육과학기술위 ▲여성위 ▲한노위 등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며칠간 냉각기를 거쳐야겠지만 합의내용의 기본 골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수석원내부총무인 서갑원 의원도 “잠정 합의된 사항마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재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보궐선거가 아닌 3선 유

선, 연장자 우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선호, 이낙연, 이종걸, 김부겸, 정장선, 추미애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유선호 의원(영암·강진·장흥)이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이 법사위원장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환노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영광·장성·함평)은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유력하지만 전남지역이 농도라는 점에서 농수산위원장 낙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위원장은 김부겸, 정장선 의원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관심사다. 우선 지역 현안과 관련이 깊은 지경위, 농수산위, 국토해양위, 재경위 등

에는 복수의 의원들이 포진할 전망이다.

우선 국토해양위에는 주승용, 이용섭 의원 등이 포진할 전망이다. 문광위에는 조영택, 서갑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위에는 김재균, 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경위에는 김효석, 강운태, 박주선 의원 등이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농수산위는 김영록, 이윤석 의원 등이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통일외무에는 박지원·박상천 의원이 법사위에는 김동철·우윤근 의원이, 행안위에는 최인기 의원이, 정무위에는 김성곤 의원이, 복지위에는 강기정 의원이 꼽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직 국회의장 초청 만찬

정래혁, 박관용.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저녁 한남동 공관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국회 운영에 관한 조언을 경청했다. 왼쪽부터 김일기, 이만섭, 김수환, 박준규, 김형오, 김재순, /연합뉴스

■ 한·일 독도 외교전 '2라운드'

미국 정부가 독도를 비롯한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영유권 표기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전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다시 수정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한층 치열한 로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외교 소식통은 2일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접고 처분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조용한 외교' 접고 장기대책 추진

日, 美에 표기 수정 치열한 로비 가능성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킨 것은 “수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주권 미지정 여부) 부분적으로 다루는 대신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와 외교적인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세계 지역을 함께

변에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식 주미대사는 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표기가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재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뢰 내지는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우리의 주권이 박탈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이후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수정하도록 비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향후 움직임이 주시된다.

미 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놓고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하는 대목이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1일 각료 17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지만 고부라 마사히코 외무상은 유임시켜 영망이 돼버린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사법 사상 최초... '구성원 다양화' 초점

■ 교수 출신 대법관 제청 의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첫 대법관으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2일 제청됐다.

사법 60년 사상 학계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제주 출신도 최초라서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이다.

기존의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1명이 검사 출신이고 학계 출신 대법관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아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구성원을 다양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이지 않았다.

더구나 양 교수는 2005년부터 세 번이나 연달아 대법관 제청 최종 후보군에 올랐지만 '조직 안정성'에 초점을 둔 인사로 막판에 탈락, 이번엔야말로 '할 때가 됐다'는 기대를 모았다.

이명박 원장도 자신의 임기종료(2011년 9월) 전까지 학계 출신 첫 대법관을 탄생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권교체 후 첫 제청이라는 시점이나 양 교수의 인지도, 경력, 출신지 등이 모두 맞아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 교수는 사법연수원 6기로 5년 남짓

관사생활을 한 뒤 서울대 법대로 옮겨 20여 년 간 강단에 섰는데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계 최

초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사실 올해 초 신설된 대법관 자리마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돌아간 다음 대법관 제청은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하는 2009년 2월에서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김황식 대법관이 지난달 돌연 감사원장에 내정되면서 기회가 마련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40여명의 후보자 중 구옥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황식 전 대법관은 장성 출신으로 이명박 원장(보성)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호남출신은 3명이고, 경남·부산출신(PK)이 5명, 대구·경북출신(TK)이 2명, 대전·충청 2명, 서울 1명 등이다.

이 때문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의 제청 가능성도 짐작됐으나 양 교수가 제주 출신이다 보니 지역 형평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장이나 신 원장은 처음 대법관 제청 후보군에 들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중 비(非) 서울법대 출신은 김지형 대법관 밖에 없어 출신학교의 다양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양 교수 또한 서울법대 출신이다. /연합뉴스

“김황식 이을 광주·전남출신 기용 바랐는데...”

■ 지역민 반응 “아쉽다”

김황식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에 따라 이뤄진 후임 대법관에 제주 출신 양창수(56·연수원 6기) 서울대 법대 교수가 제청되면서 예초 광주·전남 출신이 대법관에 선정되길 기대했던 지역 법조계와 지역민들은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이 끝까지 양창수 교수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예초 지역 법조계는 김황식 전 대법관이 장성 출신이어서 후임 대법관 자리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법관 1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보성이 고향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 김지형·이흥훈 대법관 등 3명. 이중 2명이 전북 출신이란 점을 감안할 때 광주·전남 출신이 후임 대법관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대법관의 지역 안배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 왔고, 호남 출신 중 광주·전남 출신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2명은 꽤야 구색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컸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추천한 4명 중에 광주 출신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이 포함돼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다.

광주지역 한 법조인은 “대법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 지역 출신이 될 것으로 기대된 데다 최종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이 포함돼 더욱 기대를 걸었는데 아쉽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내부에서는 “오세욱 원장이 최종 대법관 제청 4명에 포함되고, 끝까지 경합을 벌이는 등 선전했다”고 평가한 뒤 “다음해 2월께 또 한 명의 대법관 공석이 생길에 따라 그때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